

# 2030이 외친 ‘STOP THE STEAL’이 시대정의



박주현 칼럼

KCPAC 대표·변호사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은 산산이 부서졌다. 공정과 정의,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다.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설명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왜곡뿐이었다. 민경욱·황교안 등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린 정치인들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진실은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며, 거짓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많은 이를 만나 왔다. 대통령·국정원장·대통령실 수석·국회의원·언론인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연구소·제2의 백악관 마라라고·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장에까지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렸다. 개인적인 보람과 성취는 별론하고,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부정선거를 은폐한 사법부와 검찰·경찰·정치권과 언론계 등 대한민국 시스템이 모두 썩은 대로 썩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을 만난 경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하고 문제를 설명하는 내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태경 의원이 그 사진 조작된 거라던데...” 난 피식 웃으며 “그 사진, 제가 흥은숙 의정부 지방법원 부장판사 앞에서 직접 찍은 겁니다”고 말해 줬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논점을 흐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 “졸을 잘 서라”고 말했다.

졸을 잘 서라고?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진의 위치에 있는 자가 진실을 외면하고 졸을 잘 서라?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나라가 망하게 생겨도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그 정치인은 흥수를 두다가 되려 혼이 났다. 언론은 정치보다 더 심각하다. JTBC는 직접적으로 중국 공산당 산하 기업인 텐센트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았다. 중공의 간접적 영향력 아래 있는 기자들이나 언론사도 상당하다. 한 방송사의 보도국장은 부정선거 문제를 조사해보자고 제안하자 언론노조가 대놓고 반대

했다고 한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너무도 뻔하다. 언론사 기자들 중 중국인 국적자도 상당수이고, 방송사 앵커도 중국인 또는 화교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이 누구를 위해 보도를 하겠는가.

지금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지에서는 중국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캐나다에선 공식 보고서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짚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거의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 부분이 검은 세력에 먹혔다고밖에 볼 수 없다.

썩은 기득권들이 권력의 단맛과 이익에 중독되어 나라 전체를 망국과 중공의 속국이 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 베네수엘라라는 20년간 이어진 좌파 정권의 부정선거의 결과, 부유한 자원과 미스월드의 나라에서 1000만 명의 국민이 국외로 탈출한 빈곤 국가로 추락했다. 자유의 대명사 홍콩은 이제는 제1야당이 해산당할 운명에

몰진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는 국민적 각성이 시작될 것이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다. 그는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미국을 바꾸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마이클 존스 하원의장 등 트럼프 내각은 모두 트럼프와 철학과 이념을 같이하며 미국의 황금기를 열고 있다. 이들은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부정선거 세력들과 그림자정부에 강력히 맞서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 글로벌 흐름에 함께해야 한다. 썩은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정치와 언론을 바로 세우며 공정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정치와 언론이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침묵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깨어난 2030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맞은 편에 ‘탄핵 무효·민주당 퇴출’이라는 구호가 적힌 리본이 걸려 있다. 박미나선일기자

## 부정선거 은폐한 대한민국 시스템... 특히 언론이 문제 청년들, 부정선거 진상 규명과 탄핵 반대 시국선언 주도 세계 좌우하는 부정선거 세력과 그림자정부에 맞서야

처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독재 아래 무너졌다. 우리의 미래가 베네수엘라·홍콩을 닮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하나의 큰 희망을 본다. 바로 2030 세대다.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청년들은 부정선거 진상 규명과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부정행위 중단하라)”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는 좌파와 친중파 세력들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길을 열어 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대와 함께 기득권의 썩은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야 한다. 국민이 자유와 정의를 들고 나아갈 때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할 여유는 없다. 대한민국을 살릴 깨어난 민심이 이미 대통령 구속을 취소시켰고, 복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반쯤 굴복시켰다. 선관위가 온갖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제 서버 점검·감정에 응하겠다고 한다. 대법원도 국민의 무서움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물론 미국의 제제도 무서울 것이다). 누군가는 알아채는 무거운 변화가 시작됐다.

### 한봉희의 100세 건강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안마 도구는 물론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로봇까지 개발되는 등 ‘건강수명 10년 연장’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태국마사지를 받아 봐서 알 것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여행에 지친 몸을 마사지받으면 그야말로 온몸의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서 기분도 좋아진다.

그런데 마사지가 너무 센 경우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태국의 가수가 마사지를 3번 받고 몸이 마비되면서 사망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마사지는 종류도 다양하고 강도가 높아 받는 입장에서 아픈 경우가 꽤 있다. 마사지만다가 인대나 건의 약한 부위가 손상될 수도 있다.

‘동의보감’에도 안마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안마는 몸을 누르거나 문질러서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교 수련법의 하나이다.

안마를 하려면 아침에 닭이 울 때 일

###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안마



어나 정좌로 앉아 고치를 하고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빈다. 30번 정도 비비면 손바닥에서 열이 난다. 열이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을 두 눈에 대고 가볍게 20번 비빈다. 이렇게 하면 눈이 밝아지게 되며 눈이 건조하거나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이마를 비벼 주고, 머리카락이 난 부위까지 쓸어 주듯이 비빈다. 그러면 이마 주름이 없어지고 얼굴에 윤기가 난다.

또한 가운데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으로 코의 양옆을 30번씩 비벼 주면 코의 표면뿐 아니라 속에서도 열감이 느껴지게 되며 코를 잘 통하게 하여 냄새도 잘 맡게 되며 비염과 같은 질환에도 효과

가 좋다. 코는 폐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폐기능도 좋게 해 준다. 마른기침을 하거나 목에 가래가 많이 끼는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목을 마사지 해 주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깻바퀴를 비벼 주면 귀가 잘 들리게 되며 귀는 콩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콩팥의 기운까지 보태 주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싼 안마도구나 안마의자를 사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처음에는 약간 서툴 수 있지만 거의 부작용이 없고 돈도 들지 않아 좋은 편만 아니라 약간의 시간만 내면 되므로 최상의 안마가 될 수 있다.

이마는 ‘하늘의 정원’, 코는 ‘나라 가운데의 큰 산(중약·中岳)’, 귀는 나라의 ‘성곽’에 해당하며 이는 우리 몸의 정기신을 보해 주고 연관된 장기의 기능까지 좋게 해 준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건강은 스스로 챙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일산 100년의원 원장·한의학박사

## 社說

# 중유학생 美입국 금지법... 우리가 더 심각한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국 제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최근 국제적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해 미국의 군사 및 경제적 기밀을 훔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심각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리적·경제적 근접성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최근 우리나라 탄핵 정국의 와중에도 중국인의 정치적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일부에선 ‘화교 특혜’와 같은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단순한 사회적 불만의 차원으로 보진 않된다. 국가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면서 정보 수집·기술 유출, 심지어 정치적 개입을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에서 한국이 이대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지만 이에 대한 해외의 관심 또한 뜨겁다. 중국은 이미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른 국가들의 기술을 무단으로 취득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 왔다. 그런 점에서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내 연구소와 대학들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활동의 손쉬운 표적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통해 주요 기술을 훔치거나 군사 관련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차단 법안을 발의한 라일리 무어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의

중국 국민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 유학생들을 통해 미국 군대를 감시하고 지적 재산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무어 의원은 폭로했다. 즉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다.

무어 의원이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아예 입국 자체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부터 유학생들이 스파이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 이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스파이 활동을 강요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방식이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다면 한국 내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머물고 있는 중국인 수를 생각했을 때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중국인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당 때문이라니 도대체 민주당은 어느 나라를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체제 선전 도구에 불과한 ‘공자학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개설돼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미국·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공자학원을 이미 상당히 퇴출시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공자학원을 난립하는 걸 방치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 설치 대학에 현금과 인력 등 지원을 하고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본력에 야금야금 잠식당하는 형국이다.

최근 본지 사설에서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의 업무협약(MOU)을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은 이미 중국 영향력의 점진적 확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짧은 물속의 개구리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 농업·농민 위한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하자

사람이 먹고사는 것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농업에 달려 있다. 농업과 농촌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지원이 각별해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농업직불금제가 왜곡돼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직불금제는 농민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한 해 2조 원 규모로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 임대에선 신고도 할 수 없다. 지주한테 직불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그냥 농사짓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런 땅의 농민들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외된다. 불법 직불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한 이유다.

특히 정부의 직접지불금 부정 수급 단속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인 인증을 받은 임차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처벌 기준 미비와 농지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인으로 등록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돼 각각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농지임대차보호법’이 없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불법적 농지 임대차 만연한 상황임에도 농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농지법’에 한데 모아 규정하고 있어서다. ‘농지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친환경인증 취득하고 이를 유지하며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시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임차인이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계약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친환경인증 포기 압박을 무시하고 계약 유지를 위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지 임대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이미 ‘농지법’에서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모든 요건을 갖춘 유효한 임대차만 해당되므로 본 사안을 보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를 전면적으로 유효화하는 것은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농지 임대 수익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농지 임대 계약에 근거해 국가 인증까지 획득한 실경

작자인 임차인을 농업인으로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은 생명이요, 농촌은 우리의 미래다.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

## 임차인이 친환경인증 취득 후 농업 가능하게 보장 농민 아닌 땅 주인이 농업 직불금 가로채는 현실 ‘농업은 생명, 농촌은 우리 미래’ 법적 뒷받침 필요

이 긴급하다.

농업 개혁이 꽃피어 ‘선진 농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널려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비교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생산·유통 단계 축소와 수급 조절지도자 양성·전업(轉業)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은 단골 메뉴다. 이뿐인가.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농촌·농업은 더 이상 변화의 세계화 물결에서 벗어난 영역이 아니다. 정부는 농민단체 참여하여 농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농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지금 때를 놓치면 우리 농촌은 외로운 ‘워낭소리’ 할아버지들만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돌아오는 농촌, 잘사는 농촌’이란 구호 또한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음을 직시할 때다.